

치안·복지·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김 두 열
전 수 민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치안 · 복지 · 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김두얼 · 전수민



발간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환경은 그 자체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물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이처럼 치안은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치안을 위한 정부활동 역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과 상충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과연 얼마만큼의 치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부활동이 필요하며,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형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의 성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안, 복지, 경제성장’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될 일련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을 보다 체계화함은 물론, 국가 정책 전체의 틀 속에서 형사정책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치안 수준의 제고를 통해 복지 수준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목차

발간사	
요 약	1
 제1장 서 론	 3
 제2장 범죄통계 및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현황	 7
제1절 범죄 관련 조사통계: 「전국범죄피해조사」	8
제2절 행정통계	11
제3절 범죄 동향 분석	16
 제3장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현황 및 국제비교	 20
제1절 범죄 발생 현황	20
제2절 국제비교	22
 제4장 범죄 발생의 증장기 추이와 원천	 27
제1절 개괄	27
제2절 형법범 증가의 원천	31
1. 절도	32
2. 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	33

목차

3. 강력범죄 35

4. 종합 및 평가 38

제5장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분석 40

제6장 결 론 46

참고문헌 49

부 록 53

ABSTRACT 58

◆ 표 목 차

〈표 2-1〉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연혁	9
〈표 2-2〉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다루는 범죄	11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 범죄통계	12
〈표 2-4〉 『범죄분석』에 수록된 2010년의 담당 기관별 범죄통계	13
〈표 2-5〉 2010년 발생 범죄를 이용한 통계자료별 수록정보 비교	14
〈표 2-6〉 범죄 동향 관련 정기 발간물	17
〈표 3-1〉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및 기소인원(2010년)	21
〈표 3-2〉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 비교	24
〈표 4-1〉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건수 및 증가율(1980~2010년)	29
〈부표〉 형법범 분류 기준(2010년 기준)	56

◆ 그 림 목 차

[그림 2-1] 범죄 관련 통계집에 수록된 범죄 발생건수 및 처분인원 비교	15
[그림 3-1] OECD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2000~04년)	23
[그림 3-2]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이(1990~2010년)	25
[그림 4-1] 교통법범을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추이(1980~2010년)	28
[그림 4-2] 형법범과 일반특별법범의 발생건수 추이(1980~2010년)	30
[그림 4-3] 주요 유형별 범죄 추이(1980~2010년)	31
[그림 4-4] 사기 및 배임/횡령 범죄 추이(1980~2010년)	34
[그림 4-5] 손괴범죄 추이(1980~2010년)	35
[그림 4-6] 강력범죄(폭력) 추이(1980~2010년)	36
[그림 4-7] 강력범죄(흉악) 추이(1980~2010년)	37
[그림 4-8] 세부 유형별 흉악범죄 추이(1980~2010년)	38
[그림 5-1] 「전국범죄피해조사」상의 전체 범죄 추이(1993~2010년)	42
[그림 5-2] 신고율의 장기 추이(1993~2010년)	43
[그림 5-3]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한 신고범죄사건 추정치(1993~2010년)	44
[부도 1] 성폭력 범죄의 재분류(1980~2010년)	53
[부도 2] 폭행범죄의 추이(1980~2010년)	55

요 약

범죄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가 얼마나 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파악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332,153건으로, 이는 국민 100명당 3명가량이 매년 범죄피해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1%로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 형법범 사건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관련 범죄가 중요한 원천이었다. 아울러 폭력사건들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흉악범죄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상태가 좋다는 통념이 통계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러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 이후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와 결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라의 범죄 발생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부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현재보다 범죄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본 연구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은 통계의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정책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 통계를 개선하려는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는 물론 연구자들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은,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지, 피해자들은 누구이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범죄 감소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 집계방식과 동향 분석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범죄 관련 통계정보를 보다 과감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자들 역시 기존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나와 있는 통계들의 분석을 통해 통계 분석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될수록 정책당국자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방과 아울러 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치안 혹은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대상인 범죄의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범죄 관련 통계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범죄 발생 정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가늠해 보는 것이다. 범죄통계는 범죄의 정의, 실제 범죄와 드러난 범죄 간의 괴리, 일선 업무 수행자의 유인체제로 인한 왜곡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장 다루기 어려운 통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런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여러 기관들이 제시하는 범죄통계들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모순된 경향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실태를 가늠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력단계에서부터 집계방식에 이르기까지 범죄통계 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작업들이 요구된다.¹ 하지만 이미 발간된 각종 통계들을

1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는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수행해 왔는데, 가장 최근의 작업으로는 탁종연(2007), 김은경 외(2010), 강지현(2012), 박형민

그저 비판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혹은 기존 통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빈도를 가늠해 보는 작업 역시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² 본 연구는 바로 후자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파악된 범죄 발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범죄 발생 현황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비교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범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수준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장기 추세의 파악이다. 현재 『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처럼 형사정책 담당 기관들이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김두열(2011), 김일중·변재욱(2012), 민희철(2010), 표창원(2010), Kim and Kim(2012) 등은 이러한 통계들에 근거해서 범죄 증가의 원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면, 범죄 발생 실태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지난 1990년대부터 범죄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박순진(2003), 황지태(2009, 2010), 이창무(2012) 등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우리나라의 범죄가 감소해 왔음을 주장하였으며, 박순진(2012)은 일반인들이 범죄 발생에 대해 과

(2012), 홍영오·김한균(2012) 등이 있다.

2 우리나라의 학계나 정책실무자들 중에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형사 관련 행정통계들의 신뢰성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의 형사 관련 통계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룬 연구 가운데에는 “범죄통계의 정확도는 거의 믿기 어려운 정도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은경 외[2010], p.13)라는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문제제기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장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아가 실제 범죄 발생은 과연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의 검증작업을 시도한다. 즉, 길게는 지난 30년, 짧게는 최근 10년 정도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 변동을 주도한 요인이 전통적인 형사범죄인지 아니면 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인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 동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최근 들어 경제 관련 범죄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³ 반면, 김두얼(2011), 김일중·변재욱(2012), Kim and Kim(2012) 등은 1990년대 중반 정도 이후로 흉악범죄를 포함한 전통적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가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연 정부가 제한된 자원하에서 어떤 범죄에 얼마만큼 자원을 할당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지 여부는 범죄 발생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법범죄와 그 외의 범죄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 수립의 큰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본 연구가 이상과 같은 현황 파악, 그리고 이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합의 정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범죄 증가에 기여하였는지, 어떤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였는지, 나아가 형사정책과 정부의 다른 여러 정책들 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뢰할 만한 사실을 얻는 과정 자체가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연구를 구성한다고

3 예를 들어 이천현 외(2009)는 기업범죄, 박강우(2012)는 산업스파이 범죄, 김성은·김성연(2009)은 환경범죄, 이원상(2010)은 사이버 범죄, 윤중기(2009), 조병인 외(2010)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현황들과 사회경제적 요인들 혹은 정책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범죄 통계 및 범죄 동향 분석 등을 비판적으로 개괄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게 될 『범죄분석』의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제3장에서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범죄 발생 수준을 살펴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범죄분석』 통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의 장기 추이를 평가하고, 이러한 양상을 가져온 원천(source), 즉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이러한 증가를 유발하였는지를 밝혀 보기로 한다. 제5장은 「전국범죄피해조사」와 『범죄분석』 간의 비교를 통해 과연 우리나라 범죄 발생이 현재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 추세인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장

범죄통계 및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현황

과도한 단순화에 따른 위험을 다소 감수한다면, 형사정책에 대한 범경 제학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범죄공급함수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⁴ 즉 발생한 범죄(C)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S)과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D)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한다면,

$$C = f(S, D)$$

$$\frac{\partial C}{\partial S} > 0, \frac{\partial C}{\partial D} < 0$$

로 표시해 볼 수 있다. 위 식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특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 즉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범죄를 유발하며 그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범죄억지에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범죄를 얼마만큼 감소시키는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해 보고, 통계적 자료 등에 의거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바로 범죄에 대한 범경제학적 분석이라고 명

4 ‘범죄공급함수’라는 용어는 범경제학 전공자 가운데서도 형사정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다. 범죄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 즉 ‘범죄발생결정요인’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공급함수’보다는 일상적인 표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공급곡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정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일중·변재욱(2012)과 Kim and Kim(2012)이 있는데, 특히 전자는 1970년대 이래로 범죄공급함수를 추계한 연구성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명할 수 있다.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C, 즉 발생한 범죄의 실태 파악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주요 통계들을 개괄하고, 이 자료들의 작성방식, 상호관계,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아울러, 향후 범죄통계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고쳐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통계들을 기초로 전체적인 범죄 발생 동향을 개괄하는 작업을 담은 보고서와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진행될 작업의 의의 및 방향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범죄 관련 조사통계: 「전국범죄피해조사」

생성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계는 크게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서 작성하는 조사통계, 그리고 정부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행정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통계의 예로 보자면, 10년마다 작성하는 인구총조사(Census)가 전자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자료상의 인구를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가 후자에 해당한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조사통계는 인력과 재원을 투여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반면, 행정통계는 이미 행정업무 중에 생성된 정보를 취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통계가 조사통계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통계는 정부의 업무 목적, 업무 수행방식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편의로 인해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⁵ 보다 근본적으로는 행정통계와 조사통계 간에 대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5 예를 들어 노령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기록에 기초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들이 사망한 노령자를 보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 등을 수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주민등록기록, 나아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2012. 8. 13,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1. 9. 7을 참조.

〈표 2-1〉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연혁

	연도	표본 수(명, 가구)	출전 및 비고
1차	1993	2,050	최인섭 · 박순진(1993)
2차	1996	2,040	최인섭 · 기광도(1997)
3차	1998	2,100	박순진 · 최영신(1999), 1999년에는 세계범죄피해조사(장준오[2000])가 실시되었음.
4차	2002	2,048	최인섭 외(2003)
5차	2005	2,050	김지선 외(2006)
6차	2008	가구: 4,710 개인: 10,671	김은경 외(2009) 2008년에 국가공인통계로 승격 조사기간을 2년 간격으로 조정
7차	2010	가구: 7,550 개인: 16,557	김지선 · 홍영오(2011)

존재한다. 즉, 행정통계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많은 경우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양자를 모두 이용해서 통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범죄통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조사통계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범죄 발생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1994년에 처음 시작된 뒤 2005년까지 매 3년마다 실시되었는데, 2008년에 실시된 제6차 조사에서는 수행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국가공인통계로 승격되었고,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표 2-1).⁶

6 심영희 · 박정선(1991)은 1990년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1993년 이후와는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제3차 조사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범죄 발생 증가를 파악하고 1999년에 실시된 '국제범죄피해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999년이 아니라 1998년에 수행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김지선 · 홍영오(2011, pp.31~32) 등을 참조.

「전국범죄피해조사」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매회 동일한 설문 문항과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규모에 따라 나누어진 각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된 2,000명가량의 대상자에게 1년 동안 ‘가구 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문의한 뒤, 만일 범죄를 경험하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시각, 피해액, 신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표 2-2). 2008년 개편 이후에는 설문 내용과 방식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단, 이전 조사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사되었던 항목들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추가 항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전 시기와 일관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고된 범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형사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하에서 살펴볼 통계집들과는 달리 집계자료뿐 아니라 사건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죄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한 뒤 범죄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취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표본규모를 늘리는 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특정 범죄나 지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인구 10만명당 3~4건 정도 발생하는 수준의 범죄는 표본 수가 2,000명인 경우에는 표본에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한두 건만 나타나더라도 실태를 과대 반영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료 수집방식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5장에서 공식통계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2-2〉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다루는 범죄

대분류	소분류	1~5차 (1993~2005년)	6차 (2008년)	7차 (2010년)
가구대상 범죄	자동차부품절도	○		
	자동차절도	○		○
	자동차손괴			○
	주거침입절도	○	○	○
	주거침입강도	○	○	○
	주거침입손괴		○	○
	단순주거침입		○	○
	단순손괴		○	○
	주거침입기타			○
개인대상 범죄	(대인)절도	○	○	○
	(대인)강도	○	○	○
	폭행 및 상해	○	○	○
	성폭력	○	○	○
	사기		○	○
	협박·괴롭힘		○	○
	기타		○	○

제2절 행정통계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자 등의 신고에 의해 사법당국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데, 신고, 고소, 고발, 수사, 검거, 기소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전산 입력된다.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은 이때 생성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들이며, 이 원표들을 통틀어 ‘범죄통계원표’라고 지칭한다. 사법당국은 범죄통계원표를 활용해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 공표해 왔으며, 이 정보가 범죄 동향 파악, 나아가 범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⁷

7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11), 경찰청의 『범죄통계』(2011) 등의 ‘일러두기’ 참조. 각 원표의 정의 및 작성방식에 대해서는 대검찰청(2001)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 범죄통계

이름	발간처	기간 ¹⁾	발간주기	주요 특성
『범죄분석』	대검찰청	1964~현재	1년	- 수사기관 단위 집계
『검찰연감』	대검찰청	1986~현재	1년	- 지방검찰청 단위 집계
『법무연감』	법무부	1989~현재	1년	- 『검찰연감』과 동일
『범죄통계』 ²⁾	경찰청	1983~현재	1년	- 지방경찰청 단위 집계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1954~현재	1년	- 『범죄통계』와 동일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976~현재	1년	-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통계 - 전수조사

주: 1) 시작연도는 발간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연도를 지칭함. 『사법연감』의 경우, 1976년 이전에도 1960년에 1회 발간되었음.

2) 『범죄통계』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는 『범죄분석』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다가, 2006년부터는 『범죄통계』로 개칭되었음.

경찰청의 『범죄통계』, 그리고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검찰연감』은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발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범죄 행정통계 혹은 공식통계이다(표 2-3).⁸ 이 통계집들은 위에서 언급한 범죄통계원표를 이용해서 해당 기관이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본격적인 범죄통계는 아니지만,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법무부의 『법무연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역시 범죄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경찰통계연보』와 『법무연감』은 각각 경찰 및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중 일부로 범죄통계도 수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범죄통계』, 후자는 『검찰연감』 자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접수하고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 즉 사건원표를 집계해서 『사법연감』의 통계편을 작성하는데, 이 가운데 형사사건 관련 통계 부분은 범죄 사건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8 형사정책 관련 문헌에서는 『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 등을 통상 공식통계라고 지칭한다. 이때 공식통계라는 용어는 사법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라는 사실에 따른 명칭인 데 비해 본 장 제1절에 제시한 행정통계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작성 과정 혹은 방식에 착안한 명칭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병행 가능한 용어들임을 밝혀 둔다.

〈표 2-4〉 『범죄분석』에 수록된 2010년의 담당 기관별 범죄통계

	전체	담당 기관별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발생건수	1,917,300	16,065	1,734,409	48,569	118,257
검거건수	1,620,942	12,224	1,465,454	48,392	94,872
검거인원	1,769,121	16,063	1,603,398	51,280	98,380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2012), p.108, 114, 154, 205, 207 참조.

『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초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의 조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한다.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범죄분석』은 수사 담당 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별사법경찰별로 사건정보를 정리, 제공한다(표 2-4). 이에 비해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또 다른 자료인 『검찰연감』은 지방검찰청 단위로 접수한 사건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담당 업무의 차이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 내용이 다른 점도 있다. 경찰청은 기소 자체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의견’ 통계까지만 제시하고 있는 반면, 『범죄분석』은 기소 여부처럼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까지 제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은 기소가 되어 법원을 통해 처리가 된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표 2-5).

『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통계의 일관성 여부이다. 이 세 통계집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통계상의 편차로 간주하기에는 규모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의 사건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범죄통계』가 178만건인 데 비해 『범죄분석』은 192만건으로 약 14만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기본적으로 『범죄분석』이 경찰청뿐 아니라 검찰청, 해양경찰청, 특수

〈표 2-5〉 2010년 발생 범죄를 이용한 통계자료별 수록정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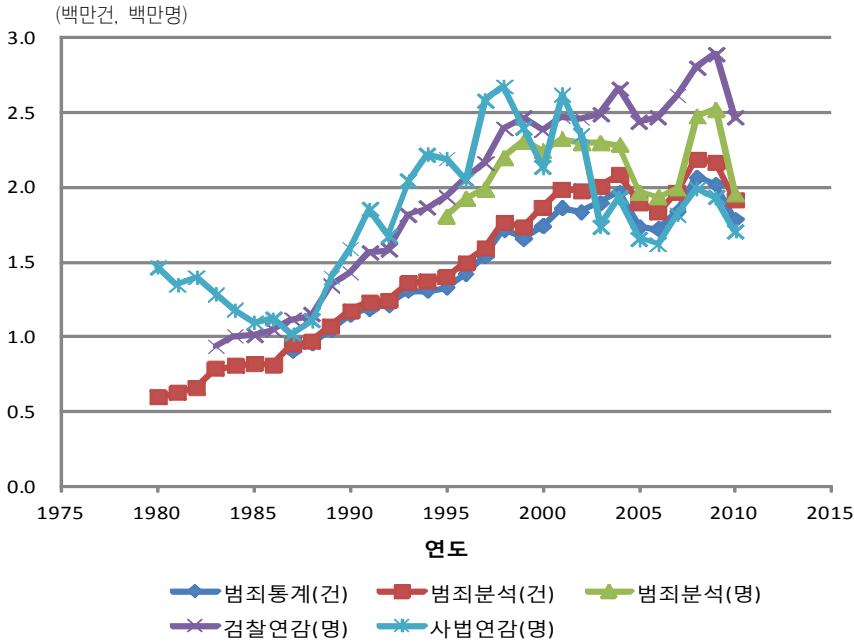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검찰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경찰청	전체		
발생건수	1,784,953	1,734,409	1,917,300		
검거건수	1,514,098	1,465,454	1,620,942		
검거인원	1,986,319	1,603,398	1,769,121		
송치의견: 총범죄자	2,007,788				
기소	1,313,501				
불기소	638,063				
기타	56,224				
(검찰) 사건접수(명)				2,464,720	
처분결과(명)			1,954,331	2,398,984	
기소			877,420	1,014,849	
(구)공판			114,298	160,407	263,425
(구)약식			763,122	854,442	868,901
불기소			1,042,862	1,253,203	
기타			33,817	130,932	
즉결					61,349

주: 대검찰청이 발행한 『범죄분석 2011』의 경우, 경찰청 단위 사건정보 집계는 pp.154~209, 검찰청 단위 사건정보 집계는 pp.108~153에서 참조.

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두 자료가 담고 있는 경찰청 사건 처리 수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 검거인원에 대한 두 자료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범죄통계』는 199만명 수준인 데 비해 『범죄분석』은 160만명으로, 거의 40만명에 가까운 큰 차이는 통계 작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의 일관성 문제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자료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범죄분석』과 아울러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또 다른 통계집인 『검찰연감』을 보면, 처분인원이 『범죄분석』에서 제시한 195만명보다 20%나 높은 240만명으로 나와 있다. 검찰 측 통계와 법원 측 통계 간에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큰 격차가 존재한다. 법원의 『사법연감』에는 형사사건 (구)공판인원이

[그림 2-1] 범죄 관련 통계집에 수록된 범죄 발생건수 및 처분인원 비교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검찰연감』, 각년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26만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검찰연감』의 16만명보다 63%, 『범죄분석』의 11만명보다는 140% 높은 것이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은 사건 발생 통계는 자료 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처분인원 통계는 자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2-1]에 제시된 것처럼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에 수록된 범죄 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으며, 추세 역시 거의 유사하다. 양자 간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 역시 앞서 언급한 요인, 즉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 통계를 반영한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처분인원 통계는 자료별로 큰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추세조차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계작성상의 오류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복수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의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검토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죄 발생건수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이 제공하는데, 양자는 사실상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분인원 관련 정보는 『범죄통계』, 『범죄분석』, 『사법연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개선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의 수집을 비롯한 통계 작성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⁹ 그런데 이상의 비교는 각 기관 단위별 노력뿐 아니라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역시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각 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개념 정의나 집계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기준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통계집별로 각 통계의 정의 및 집계방식을 가급적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료 간 통계의 차이 자체가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통계 정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3절 범죄 동향 분석

『범죄분석』이나 『범죄통계』에 제시된 통계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는 사법기관들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들, 정책연구기관의 동향분석, 그리고 기타 연구 논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 주 1 참조.

〈표 2-6〉 범죄 동향 관련 정기 발간물

발간물	발행처	기간	발행주기	비고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84~현재	1년	- 자료: 『범죄분석』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06~현재	1년	- 자료: 『범죄분석』
「전국범죄피해조사」	형사정책연구원	1993~현재	2~4년	- 자료: 설문자료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976~현재	1년	- 자료: 각급 법원의 통계
『경찰백서』	경찰청	1995~현재	1년	- 자료: 경찰청 범죄 통계

우선 범죄 동향 관련 연차보고서로는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와 경찰청의 『경찰백서』가 대표적이다(표 2-6). 이들은 『범죄분석』이나 『범죄통계』와 같이 각 기관이 발간하는 통계자료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그림이나 표를 통해 제시하고, 간단한 해설 및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현재 범죄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위에서 체계적으로 작성된다고보다는 주요 통계 및 기본자료를 나열하고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이 자료들은 정책방향 설정이나 예산 배정 등의 기초가 되는 동향 분석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일반인들을 위한 통계 해설 혹은 보도자료로서의 성격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¹⁰

이에 비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은 『범죄분석』의 자료 혹은 이것에 기초해서 자체 제작한 ‘범죄분석 통계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년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 및 제시하는 대표적인 동향분석 보고서이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를 서술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체적인 범죄 동향의 파악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 대응방안 제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발생 동향을 파악하거나 국제비교를 시도한 작업은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단, 이러한 개별

10 통계집이라 할 수 있는 『범죄분석』이나 『범죄통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보다 축약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범죄 분석들은 특정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제시해 주지만 범죄 발생의 전체 동향을 제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간략한 개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계 수치를 단순히 서술,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의 범죄 발생 현황을 총괄해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다음 장들에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즉 왜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형사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통계를 통한 동향 파악과 정책방안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다음 세 가지 문제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범죄통계 자체의 특성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통계는 그 성격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많은 범죄는 아예 신고가 되지 않으며, 신고가 된 범죄의 경우도 단일 사건에 여러 가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고 원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사법당국 내부의 유인체계 역시 접수된 범죄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는 과정에 왜곡을 야기하기도 한다.¹¹ 그 결과 범죄통계는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작성은 되었으나 정책에의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²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에 간행된 통계들은 많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통계 자체의 개선을 위한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존 통계들의 분석을 통해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 역시 현재보다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1 예를 들어 박형민(2012), 탁종연(2011, pp.260~261) 등을 참조.

12 김은경 외(2010, p.13), 홍영오·김한균(2012, p.5) 등 참조.

둘째는 통계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다. 범죄 관련 자료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식견에 기초해서 통계 작성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범죄통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통계작업에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 생성 및 통계 작성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역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통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형사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원 투입 부족만큼이나 통계의 개선을 막고 있는 요인은 비개방적 접근이다. 현재와 같이 통계 작성방식이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통계를 더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당국이 제공하는 집계 통계만을 이용해서 범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향후 개인의 신변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적절하게 제거한 뒤 범죄통계원표를 연구자들에게 조건 없이 공개함으로써, 즉 관계 기관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필요한지가 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통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정부가 발간하는 통계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여부는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분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

13 자료 공개의 중요성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김은경 외(2010, pp.23~24) 역시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현황 및 국제비교

본 장에서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범죄분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을 파악한 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 정도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발생에 대한 통계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에 제시되어 있는데, 양자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건 큰 차이는 없다. 단, 『범죄분석』은 『범죄통계』에 비해 시계열 정보가 보다 길다는 점, 그리고 범죄 발생으로부터 사법 처리까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분석의 확장에 용이하다는 점이 『범죄분석』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다.

제1절 범죄 발생 현황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접수된 범죄는 총 1,917,300건이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정의되는 범죄 발생비는 약 3,923건으로, 매년 인구 100명당 4명 가량이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1).

그런데 1,917,300건을 있는 그대로 범죄건수로 보는 것은 현황 파악이나 국제비교의 양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표 3-1〉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및 기소인원(2010년)

(단위: 건, %)

사건 유형	발생건수	검거건수	기소인원(명)
전체 범죄	1,917,300	1,620,942	877,420
형법범	939,171	710,416	287,047
절도	268,007	145,978	162,615
재산	300,616	228,582	250,098
강력	266,490	244,501	295,177
기타	104,058	91,085	112,184
특별법범	978,129	910,796	949,047
일반 특별법범	392,982	348,367	383,571
교통범죄	585,147	562,429	565,476

주: 1) 일반 특별법범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특별법범을 의미함.

2) 사건 유형의 작성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범죄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죄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범죄분석』에서는 신고 등을 통해 사법당국에 접수된 실정법 위반 사건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지칭하는 실정법 위반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형법범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자를 지칭하며, 특별법범은 형법 이외의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가리킨다.¹⁴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법범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법범이다. 〈부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법범과 관련된 법령은 좁게 보면 4개, 넓게 보면 2개를 더 포함해서 6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범죄건수에서 교통법범의 비중은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규모가 크다.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범죄 가운데 교통법범은 585,147건으로, 특별법범의 60%, 전체 범죄의 30.5%를 차지한다. 이처럼 교통법 위반행위는 단일 유형의 범죄로서는 그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¹⁵ 교통 관련 위반

14 2010년 『범죄분석』에는 특별법범란에 ‘기타’를 포함, 189개 법령이 열거되어 있다.

15 교통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은 경찰이 관할하는 주요 업무이며, 동시에 적지 않은 인명 상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나 통상적인 범죄 분석상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교통법범을 배제한 범죄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이 현황 파악에 보다 적절할 수 있다.¹⁶

이상의 이유로 이하에서는 교통범죄를 배제한 전체 범죄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2010년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 범죄건수는 1,332,153건, 그리고 범죄발생비는 2,725건이다.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2010년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약 3명 정도가 범죄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제2절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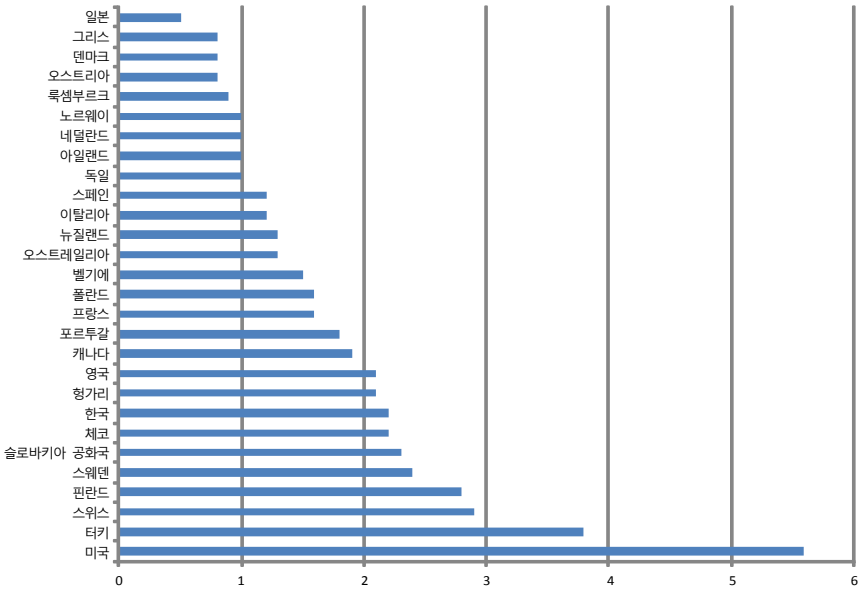
과연 제1절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나라의 범죄 발생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단 범죄통계의 경우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법 규정과 집계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지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첫째는 살인사건 발생건수이다. 살인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복잡한 문제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사건은 한 나라의 전통적 범죄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와 관련해서는 기광도(2000), 정신교(2008) 등을 참조.

16 예를 들어 범죄 발생건수를 국제비교할 경우에도 교통범죄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최인섭(2003), 전영실 외(2011) 등 참조.

[그림 3-1] OECD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2000~04년)



주: 인구 100,000명당 발생률로 계산함. 이 그림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멕시코는 제외하였음. 멕시코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13명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범죄 발생률 비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임.
 자료: UNDP(2008), pp.322~325.

[그림 3-1]은 UNDP가 집계한 전 세계 범죄통계 가운데 OECD 국가들을 뽑아 비교한 것이다. 김두열(2011, pp.167~168)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인 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표적인 지표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사건의 발생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둘째, Van Dijk *et al.*(2008)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2003~04년도에 OECD 국가들 내에서 전통적 범죄(conventional crime)들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설문 문항들이 우리나라의 「전국범죄피해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교를

〈표 3-2〉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인구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 비교

범죄 종류		1999		2004~05 ¹⁾	
국문명	영문명	한국	OECD	한국	OECD
전통적 범죄	Conventional Crime	21.0 ²⁾			15.5
차량절도	Theft of cars	0.4	1.0	0.35	0.8
차량부품/물품절도	Theft from or out of cars	3.7	4.7	3.55	3.5
차량손상	Damage of car	8.9			
오토바이절도	Motor-cycle theft	8.0	0.3		0.3
자전거절도	Bicycle theft	11.5	3.8		3.1
주거침입절도	Burglary with entry	4.7	2.0	4.30	1.8
주거침입절도미수	Attempted burglary	2.8	4.1		3.8
대인절도	Theft of personal property and pick-pocketing	2.0	1.0	1.41	1.0
강도	Robbery	0.3		0.39	1.0
성폭력범죄	Sexual offences against women	1.2	0.6	1.02	0.6
폭행, 상해, 협박범죄	Assaults or threats	1.5	3.8	0.54	3.1
신종범죄	Non-conventional Crime				
소비자사기	Consumer fraud	11.1	9.3		11.0
부패	Corruption				1.9

주: 1) 2004~05년의 경우, 한국은 2005년, OECD는 2004년 정보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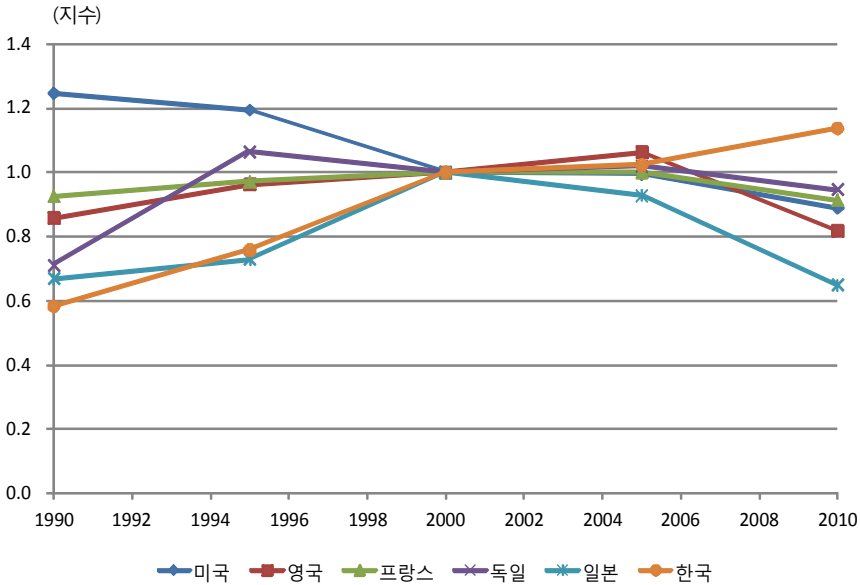
2) 차량손상을 제외하고 구한 평균값임.

자료: 장준오(2000); 김지선 외(2006); Van Dijk *et al.*(2008).

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3-2〉는 1999년과 2004년도에 대해 비교 가능한 범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단일한 지표를 만들어 비교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어렵지만, 개별 항목들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이 OECD 평균 수준보다는 다소 높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절도, 폭행과 같은 전통적 범죄의 발생건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덧붙여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00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Van Dijk *et al.*[2008], p.40). 2000년대 이후 범죄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은 개별 국가들의 행정통계들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3-2]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이(1990~2010년, 2000년 = 1)



주: 2000년 사건 수는 미국 11,608,070, 영국 5,301,187, 프랑스 3,771,849, 독일 6,264,723, 일본 2,443,470, 한국 1,170,968임.

- 자료: 1. 미국 FBI 범죄통계(www.2fbi.gov/ucr/cius2009/index.html)
 2. 영국 내무부 범죄통계(www.homeoffice.gov.uk/science-research/research-statistics/crime/crime-statistics)
 3. 프랑스 내무부 범죄통계(www.interieur.gouv.fr/sections/a_votre_service/statistiques/criminalite)
 4. 독일 연방 형사청 경찰범죄통계(www.bka.de/nm_194552/EN/Publications/PoliceCrimeStatistics/policeCrimeStatistics__node.html?__nnn=true)
 5. 일본, 『범죄백서』(www.npa.go.jp/english/index.htm)

현상이다(그림 3-2).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⁷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역시 2000년대 들어서서는 범죄 증가가 사실상 멈추거나 감소 추세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면, 비록 평균 수준은 높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덜

17 대표적으로 Levitt(2004), Dills *et al.*(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는 상반되게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경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하는 다음 장의 작업은 절대 수준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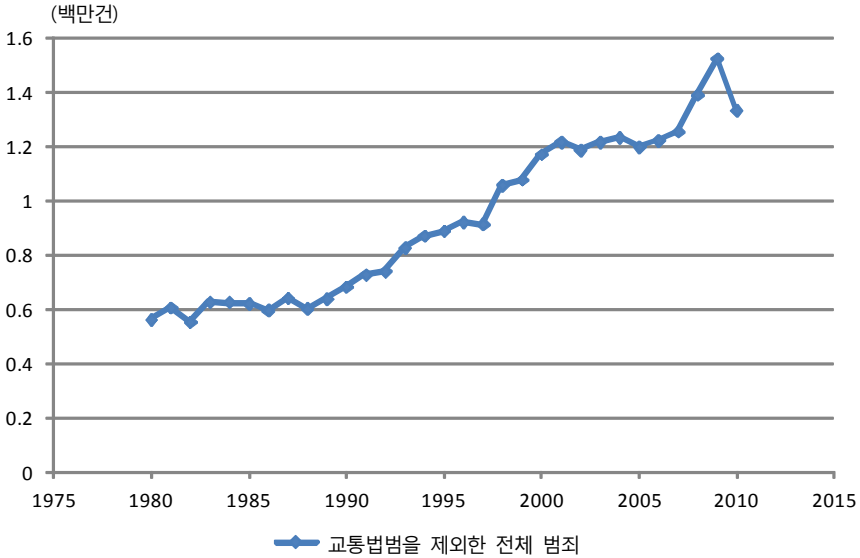
범죄 발생의 중장기 추이와 원천

제1절 개괄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접수된 총범죄 가운데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 사건 수는 1,332,15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정의되는 범죄발생비는 2,725건이다. 이것은 1980년 약 56만건 이던 것이 30년간 약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당 기간 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이다(그림 4-1 및 표 4-1 참조).

『범죄분석』상의 범죄건수는 실제 사건의 변동뿐 아니라 법령의 변화, 집계방식의 변화, 피해자나 사건 담당자들의 행동방식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가를 모두 실제 범죄 증가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 최근 10년간의 변화로 기간을 한정해서 보면 측정대상의 정의 등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왜곡을 다소 줄일 수 있으며, 현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에 발생한 범죄건수는 1,170,968건으로, 2010년까지 10년 동안 범죄건수가 약 13.8% 증가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1% 수준이다. 이 결과는 2000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최근 들어서는 사건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증가 추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 교통법범을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 추이(1980~2010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그림 4-1]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범죄가 이러한 증가 추세를 주도하였는지, 즉 범죄 증가의 원천(source)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범죄분석』은 전체 범죄를 일차적으로 형법범과 일반 특별법범으로 나누고 있는데, 범죄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나 편의라는 점 모두에서 이 구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¹⁸ 단, 법령의 변화로 인해 형법범 내에서의 분류 변화는 물론, 특별법범 사건에 해당되었던 법령이 형법범으로 변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았다. 범죄 변동의 일관된 추이를 파악하고자 2010년의 범죄 분류방식에 맞추어 과거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중요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형법범과 일반 특별법범의 발생건수 추세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추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18 형법범, 특별법범의 정의는 제3장 제1절 참조.

〈표 4-1〉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건수 및 증가율(1980~2010년)

(단위: 건, %)

	사건 수(건)				연평균 증가율(%)			
	1980	1990	2000	2010	1980~1990	1990~2000	2000~2010	1980~2010
전체 사건 수	562,937	683,474	1,170,968	1,332,153	3.0	5.8	2.1	3.4
형법범	401,486	390,158	796,584	939,171	1.3	6.9	2.9	3.5
절도	101,043	96,168	166,796	271,213	1.3	7.8	13.9	5.2
재산	53,532	62,245	201,608	297,410	5.2	12.7	2.7	7.7
사기	34,798	43,209	161,986	205,913	6.4	14.8	1.2	8.4
배임/횡령	16,164	15,937	26,733	40,931	3.6	5.2	2.5	4.8
손괴	2,570	3,099	12,889	50,566	1.7	16.2	25.9	12.6
강력(전체)	127,542	189,265	341,450	266,490	5.6	6.2	-0.5	3.4
강력(홍악)	7,259	11,440	14,573	27,482	6.8	5.8	5.5	5.6
살인	536	666	964	1,262	3.9	5.5	2.6	3.9
강도	2,374	4,195	5,349	4,395	13.1	5.2	1.0	6.3
방화	372	1,060	1,278	1,886	11.4	9.0	5.4	6.6
강간	3,977	5,519	6,982	19,939	4.2	7.1	8.0	6.1
강력(폭력)	120,283	177,825	323,670	239,008	5.6	6.3	-0.9	3.2
기타	119,369	42,480	86,730	104,058	-6.4	7.6	2.8	1.1
일반 특별법범	161,451	293,316	374,384	392,982	6.8	4.1	1.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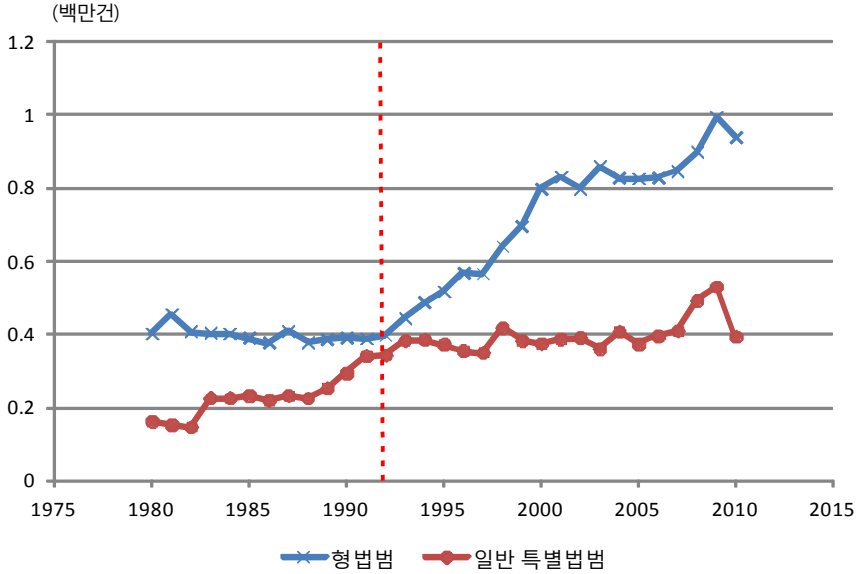
주: 1) 각 범죄의 범주는 2010년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것임.

2) 전체 사건 수에서 교통범죄는 제외하였음.

3) 절도범죄에는 장물이, 재산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되었음.

4) 강력(전체)=강력(홍악)+강력(폭력), 강력(홍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이 포함됨.

[그림 4-2] 형법범과 일반특별법범의 발생건수 추이(1980~2010년)



주: 범죄의 범주는 2010년 기준에 따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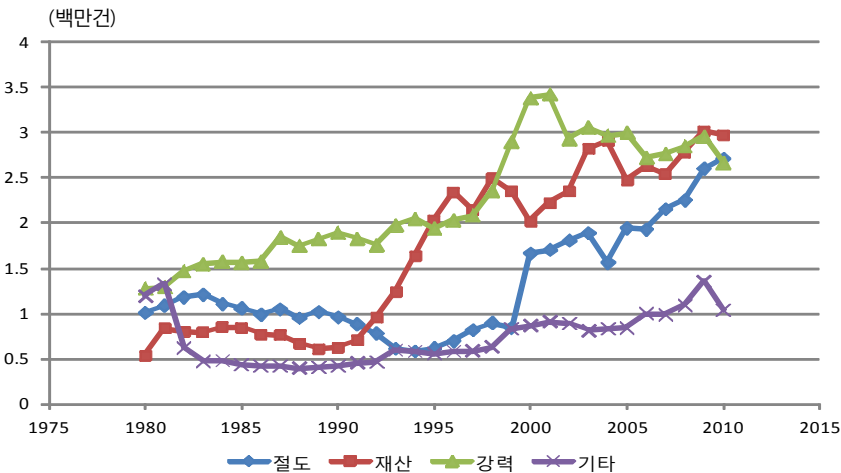
보여준다. 우선 형법범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40만건을 전후로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00만건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일반 특별법범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볼 때, 그 이전에는 일반 특별법범이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형법범이 범죄 증가를 주도해 오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범죄 증가를 이해하려면 형법범 증가를 주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추적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제2절 형법범 증가의 원천

형법범 증가의 원천을 파악하고자, 이하에서는 사건의 특성 및 발생건수 등을 고려해서 형법범 사건들을 ‘재산’, ‘절도’, ‘강력’, ‘기타’ 범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 중 기타를 제외한 3개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은 2010년 형법범 사건의 8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범죄건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에는 이 네 개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앞서 <표 4-1>에서는 범주별 사건 수 및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범주들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단, 이러한 증가 추세가 단선적이기보다는 많은 굴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림 4-3] 주요 유형별 범죄 추이(1980~2010년)



- 주: 1) 절도범죄에는 장물이 포함되었음.
 2) 재산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되었음.
 3) 강력범죄에는 흉악, 폭력이 포함되었음.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형법범 증가가 얼마만큼 실제 사건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절도

절도범죄는 2010년에 271,213건이 발생하였다.¹⁹ 이는 형법범 사건 중 단일 사건 종류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며, 해당 연도 전체 형법범 사건의 28.5%에 해당한다. 절도사건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10만건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1990년대 중엽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 16만건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최근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27만건에 육박하게 되었다.

절도범죄의 장기 추세가 연속적인 증가를 보이기보다는 1990년대 중후반의 감소세 이후 급증 형태를 띠는 것은 범죄기록 방식상의 문제가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탁종연(2011, pp.261~264)은 1999년 11월 이무영 전 경찰청장 취임 이후 ‘범죄통계 원년의 해’ 정책을 선포한 뒤, 2000년 이전에는 절도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접수하지 않거나 혹은 접수를 했더라도 발생통계원표를 기록하지 않던 사건들을 공식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점이 절도범죄건수의 급증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영실 외(2011, p.68)도 과거에 절도범죄 중 일부가 경찰에 접수는 되었으나 공식범죄통계로는 집계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1990년대 이전 형사법범 사건이 40만건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일부 설명해 준다. 아울러 과거에 존재하였던 통계상의 왜곡이 어떠한지, 그리고 1998, 1999년에 있었던 급격한 범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2000년에 16만여 건이던 절도사건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9 여기서 절도는 『범죄분석』상의 절도와 장물 항목을 합한 것이다. 실제로 장물 항목은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절도 항목만을 보더라도 본 소절의 논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7만건에 이른 사실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2000년 이후 절도범죄의 지속적 증가는 집계방식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신고된 사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2. 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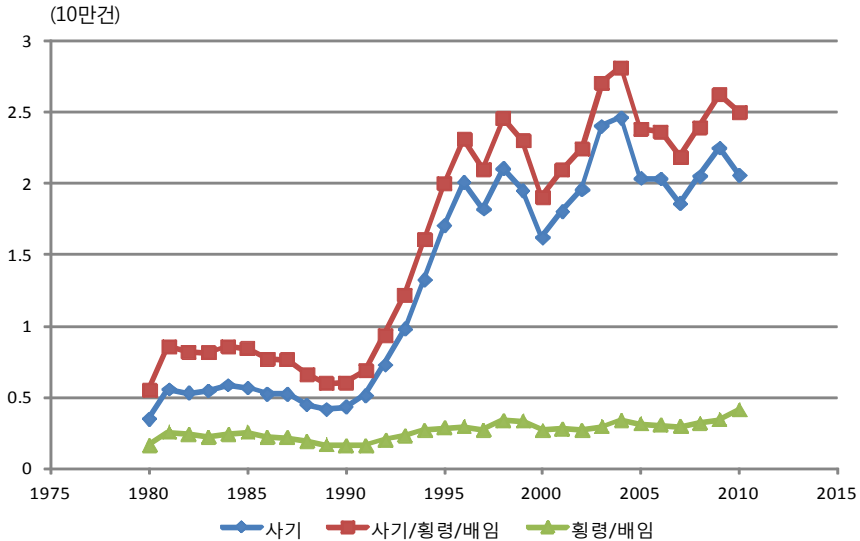
『범죄분석』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절도는 단일 범죄 항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별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소절에서는 절도 및 장물을 제외한 재산범죄를 편의상 재산범죄로 지칭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산범죄는 ‘사기’, ‘배임/횡령’, ‘손괴’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하다. 2010년의 경우 ‘사기’는 205,913건, ‘배임/횡령’은 40,931건, 손괴는 50,566건 발생하였다. 각각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기범죄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5만건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던 것이 1990년대 초중반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대 말에는 20만건 수준에 도달한 뒤,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임/횡령은 1980년대에 2만건 미만이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4만건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 이전에는 사기사건이 배임/횡령 사건보다 약 2~3배 많은 정도였지만, 현재는 10배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법무연수원(2011), 최인섭(2002, 2003), 황지태(2010) 등은 1990년대 초 중반부터 사기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한 가지 가능성은 민사상의 계약 위반 혹은 투자 실패 관련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하는 일이 증가한 결과 사기 나아가 배임/횡령 사건의 증가가 나타났을 가능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원표 자료, 더 나아가 사건기록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손괴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5천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까지

[그림 4-4] 사기 및 배임/횡령 범죄 추이(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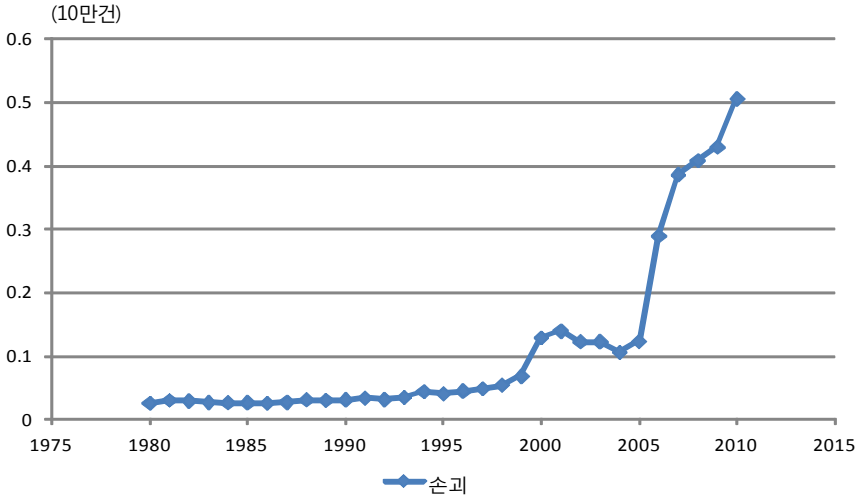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왔다.²⁰ 그러던 것이 2006년에 약 2만 8천건으로 크게 상승한 뒤, 이후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5만건에 이르렀다. 2006년 당시 손괴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조현욱(2008)은 대법원에서 손괴죄 관련 판결(2007도 2590)을 통해 ‘효용침해(제366조 제3항)’의 해석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점이 이러한 사건 증가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²¹ 그러나

²⁰ 2000년의 증가는 전술한 ‘범죄통계 원년의 해’ 정책 선포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탁종연(2011)은 절도범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절도범죄만이 아닌 ‘경찰의 수사재량’이 가능한 위반 유형의 범죄통계가 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손괴죄 위반행위의 발생건수도 재량에 의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²¹ 조현욱(2008)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벽면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대립적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복직요구 집회 도중 회사 건물 외벽에 라커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약 341만원 가량 해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2007도2590). 이와 같은 판결은 ‘벽면의 광고부착행위’ 및 ‘외벽의 낙서행위’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도 손괴죄에 포함하여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림 4-5]에서와 같은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손괴범죄 추이(1980~2010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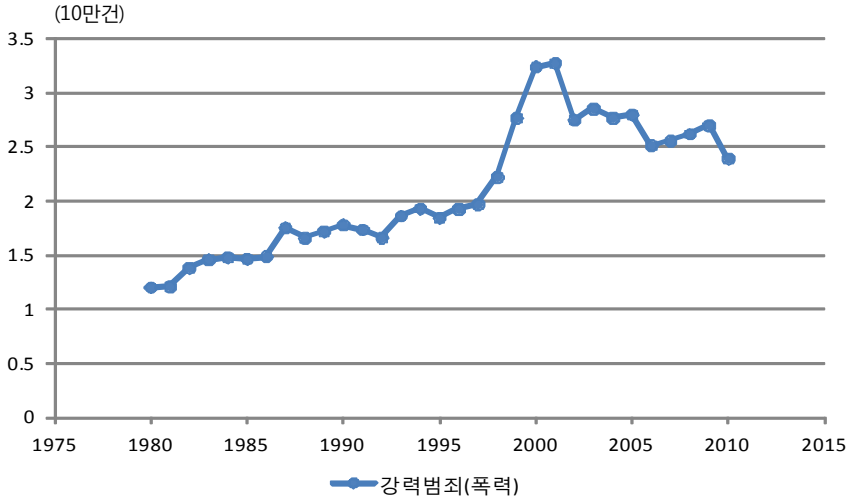
실제로 이러한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원표와 재판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한다면, 재산범죄를 구성하는 개별 범죄들은 모두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지난 30년간의 동향을 보면, 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의 장기 추이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기사건의 증가였다. 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한정해서 볼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범죄의 증가율은 연평균 2.7%였는데, 사기사건은 20만건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고, 여기에 손괴범죄의 급증이 결합한 결과 재산범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3.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크게 강력범죄(흉악)(이하 ‘흉악범죄’)와 강력범죄(폭력)(이하 ‘폭력범죄’)으로 구분된다.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4개 범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생명 및 재산에 가장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는

[그림 4-6] 강력범죄(폭력) 추이(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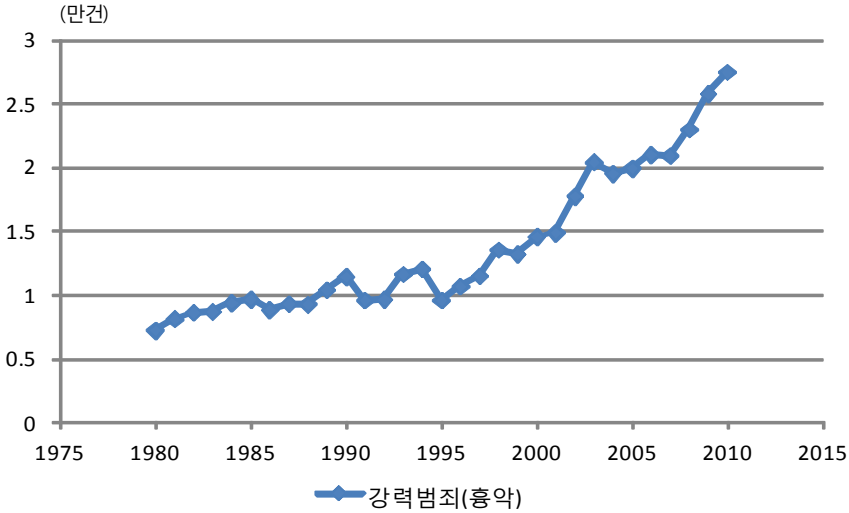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범죄군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는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들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2010년에 강력범죄는 266,490건 발생하였는데, 89.7%를 차지하는 239,008건이 폭력범죄이며, 나머지 10.3%에 해당하는 27,482건이 흉악범죄이다(표 4-1).

폭력범죄는 1980년 120,283건이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323,670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0년에는 239,008건까지 줄어들었다(그림 4-6). 7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발생건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폭행과 상해의 경우, 2005년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폭행’은 1만건대에서 6만건대로, ‘상해’는 3만건에서 8만건으로 급증하였다. 반면 ‘폭력행위 등’ 사건의 발생건수는 20만건대에서 5만건대로 크게 감소하였다.²³

²² 아울러 특별법범으로 분류되던 ‘폭력행위 등(단체등의 구성·활동)’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통합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그림 4-7] 강력범죄(흉악) 추이(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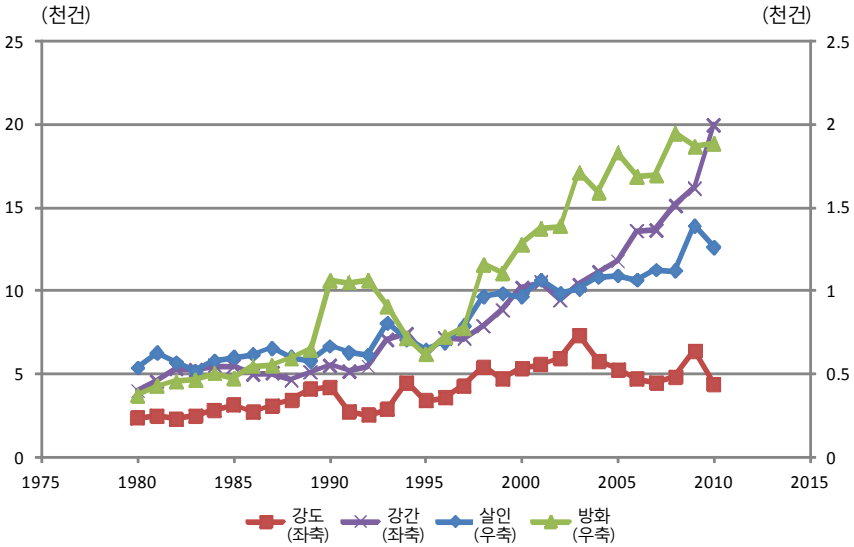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나는 항목별 변동의 양상은 실제 범죄의 변화보다는 분류방식 등의 변화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이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범죄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00년 이후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흉악범죄는 전체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에 전체 범죄건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아울러 이 범죄가 흔히 치안 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범죄(index crime)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고찰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7]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흉악범죄는 1980년 7,259건 발생하였던 것이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27,482건이 발생하였다. 흉악범죄를 구성하는 사건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 유형 모두 연평균 증가율 4~6%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그림 4-8). 4가지 유형 중 강간이

23 유형별 통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그림 4-8] 세부 유형별 흉악범죄 추이(1980~2010년)



주: 강간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건수도 포함(부록 참조).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전체 흉악범죄의 절반가량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약 6%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이나 방화 등 사건인지도의 변화가 크게 작용할 요인이 없는 사건들도 각각 3.9%, 6.6%로 높은 연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지표범죄의 장단기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된다.²⁴

4. 종합 및 평가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범죄는 연평균 3.4% 증가하였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형법범과 일반 특별법범의 연평

²⁴ 흉악범죄 증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김두열(2011), 제5장 및 김두열·김지은(2009) 참조.

균 증가율이 각각 3.5%와 3.7%로, 두 유형의 범죄가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증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시기별로 보면 두 범죄의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일반 특별법범이, 그 이후에는 형법범이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 기간만을 놓고 보면, 일반 특별법범 증가율은 1.0%인 데 비해 형법범은 그 3배에 육박하는 2.9%이다. 사건 수에 있어서도 형법범은 94만건인 데 비해 일반 특별법범은 39만건으로, 전자가 후자의 2.4배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일반 특별법범 증가를 현재와 같이 억지하되, 동시에 형법범 사건의 증가 추세를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동안 형법범 변동의 원천을 살펴보면, 폭력을 동반한 사건들, 즉 강력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절도 및 사기, 배임/횡령 범죄는 증가세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전체 형법범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 강력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보다 나쁜 흉악범죄는 전체 형법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지난 10년간 형법범의 증가는 재산침해사건이 주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분석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범죄분석』으로부터 도출한 제4장의 결과를 실제 범죄 동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전국범죄피해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박순진(2003), 황지태(2009, 2010), 이창무(2012)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파악된 범죄율 변동에 근거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범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범죄분석』 같은 행정통계에 나타난 범죄의 증가는 실제 범죄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신고율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를 자료 분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은 범죄 관련 통계의 이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궁극적으로는 형사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명확히 해보기로 하자. t 년도에 사법당국이 인지한 범죄건수 혹은 『범죄분석』에 기록된 범죄건수(C)는 실제 범죄 발생건수(V)와 신고율(ρ)이 작용한 결과이다.

$$C_t = \rho_t V_t \quad (1)$$

즉,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t 년도에 사법당국이 인지하는 범죄인 C 가 증가할 경우, 이는 발생사건 V 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 ρ 의 상승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C 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대해 박순진(2003), 황지태(2009, 2010), 이창무(2012)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이러한 추세가 V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ρ 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출된 표본범죄 발생률(μ_t)에다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H_t) 혹은 인구수(TP_t)를 곱할 경우, 실제 범죄 발생건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V_t = \mu_t^{TP} \cdot TP_t + \mu_t^H \cdot H_t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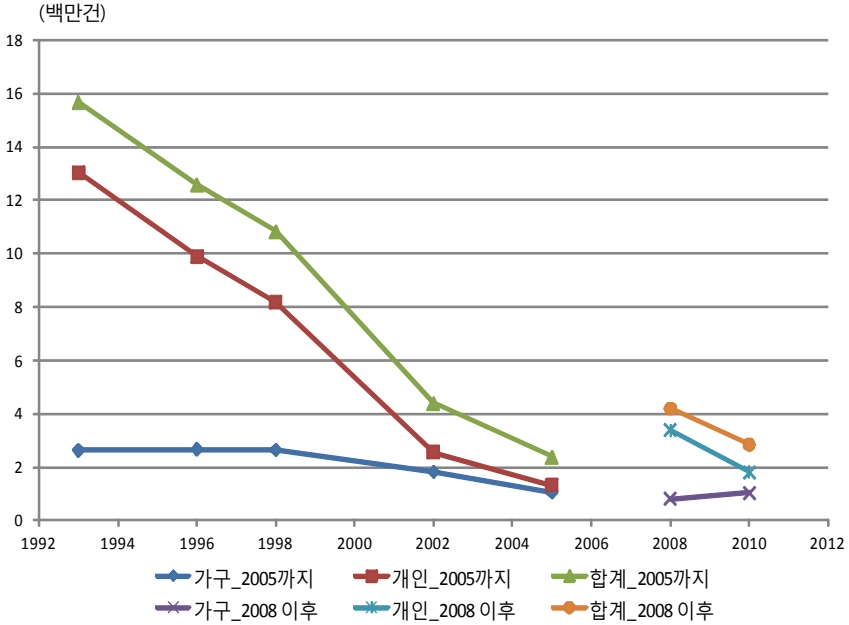
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범죄건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²⁵

「전국범죄피해조사」로부터 확인된 표본범죄 발생률에 식 (2)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를 추론한 결과가 [그림 5-1]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범죄피해조사」가 다루는 8개 범죄 수는 1993년 1,600만건 수준이던 것이 2005년에 1/8 수준인 200만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가 처음 이루어지던 시기의 자료가 다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결과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분석』이 제시하는 통계와는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엽까지 『범죄분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범죄가 계속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박순진·최영신(1999, pp.70~71)은 1993~98년 기간 동안, 그리고 김지선 외(2006, pp.77~79)는 1993~2005년 기간 동안 실제 발생 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론하였으며, 최근 들어 황지태(2009, 2010), 이창무(2012)는 보다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가 지난 20~30년 기간 동안 크게 감소해 왔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25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범죄피해를 가구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라서 가구대상 범죄의 경우는 발생률에 전체 가구 수를, 개인대상 범죄는 발생률에 전체 인구수를 곱해서 총 범죄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1] 「전국범죄피해조사」상의 전체 범죄 추이(1993~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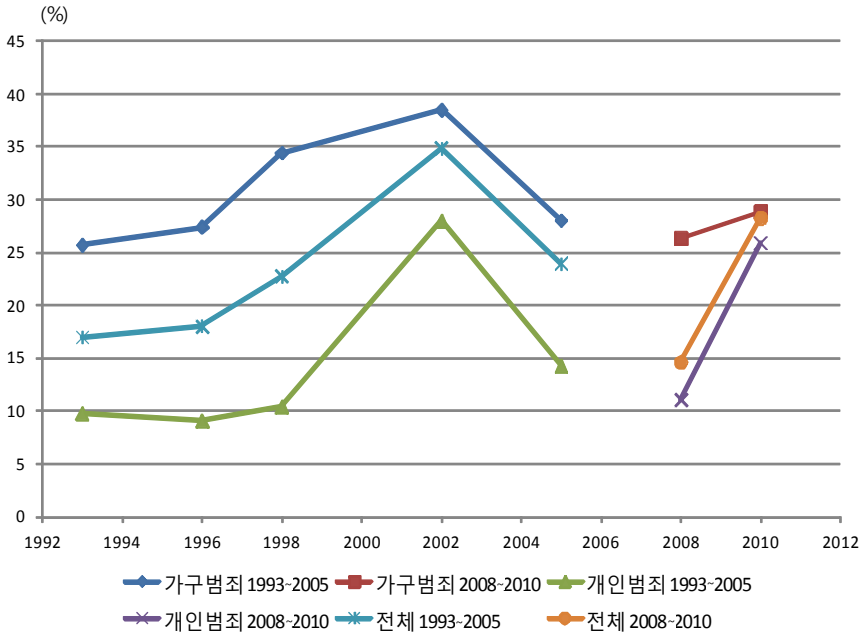
주: 본문에 소개한 바와 같이 2005년까지와 2008년 이후는 문항, 조사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2005년과 2008년 간에는 통계적 단절이 존재함. 이 두 시기를 잊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임.

자료: <표 2-1>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통계의 한계만큼이나 조사통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 자체가 실제 범죄 변동을 잘 반영하도록 응답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려면 실제 설문과정 전체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 보다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신고율 변동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만일 범죄 감소론자들의 주장처럼 실제 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범죄가 증가하고 있었다면, 이는 식 (1)의 ρ 가 해당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고율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매회 범죄피해를

[그림 5-2] 신고율의 장기 추이(1993~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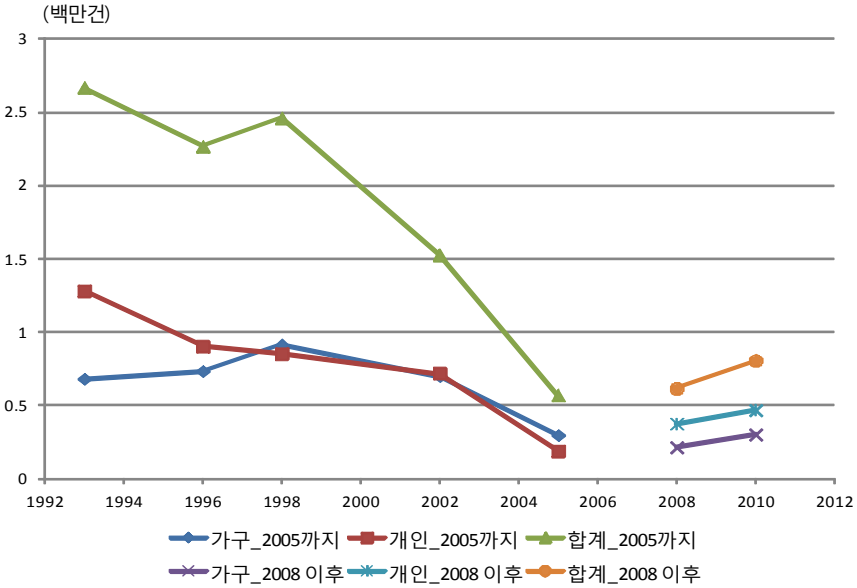
자료: <표 2-1> 참조.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범죄통계의 범죄 증가가 신고율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범죄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추론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

[그림 5-2]는 신고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으로부터 뚜렷한 추세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림 5-1]에서와 같은 급격한 사건 감소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은 [그림 5-1]과 [그림 5-2]의 자료를 식 (1)에 적용해서 신고사건 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범죄분석』상의 추세에 근접한다면, 이것은 범죄 증가가 신고율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5-3]은 이상의 과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그림 5-3]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한 신고범죄사건 추정치(1993~2010년)



자료: 통계청, 「전국범죄피해조사」, 각년도.

기간을 보면, 「전국범죄피해조사」로부터 계산한 범죄발생건수 추정치와 신고율 추정치로 계산한 신고사건 수는 실제 신고사건 수의 추이와는 상반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신고율이 실제 신고사건 수를 제시해 줄 만큼 충분히 상승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림 5-2]의 신고율 추이는 실제 사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 증가로 인해 『범죄분석』상의 사건이 증가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한편, 2008년 자료 수집방식을 개선한 이후의 기간을 보면 신고범죄건수 추계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실제 사건 수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8년과 2010년 2개년만을 놓고 비교할 경우, [그림 4-1]에 나타난 것처럼 『범죄분석』에 기록된 사건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상의 분석은 「전국범죄피해조사」로부터 도출한 사건 발생 수와 신고율 간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설문방식 등에 대

한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과연 범죄 관련 통계들이 실제 범죄 증가를 얼마나 반영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제 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통계가 이를 과장하고 있으리라는 추론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범죄분석』이 보여주는 추이를 손쉽게 기각하거나 무시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범죄분석』에 근거해서 범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 가지 이유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측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것은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경험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 전체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할 경우 큰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 유형 등을 추론하는 것도 많은 무리가 따른다. 2005년까지는 표본규모가 2,00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을 수 있다. 2008년 이후에는 표본의 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범죄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또 세부 범죄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표본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은 실시주기를 2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대신 한 번 실시할 때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다면 현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범죄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가 얼마나 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파악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332,153건으로, 이는 국민 100명당 3명가량이 매년 범죄피해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1%로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 형법범 사건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 관련 범죄가 중요한 원천이었다. 아울러 폭력사건들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흉악범죄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상태가 좋다는 통념이 통계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러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 이후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와 결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부는 범죄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현재보다 범죄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본 연구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은 통계의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정책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 통계를 개선하려는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는 물론 연구자들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은,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지, 피해자들은 누구이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범죄 감소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 집계방식과 동향 분석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범죄 관련 통계정보를 보다 과감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자들 역시 기존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나와 있는 통계들의 분석을 통해 통계 분석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될수록 정책당국자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로부터 확인된 범죄 발생 현황에 기초해서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범죄 증가를 야기하였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할 작업이다. 특히 경찰력 확충, 기소율 제고, 형량 증가와 같이 정부가 범죄를 억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억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2, pp.77~112.
-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 『국민일보 쿠키뉴스』, “‘눈먼’ 기초노령연금: 사망자에 9억 지급 등 2011년 들어 14억 부당 수급,” 2011. 9. 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31628&cp=nv>
- 기광도, 『교통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대근·안성조,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총서 11-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김두열,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해남, 2011.
- 김두열·김지은,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158~194.
- 김성온·김성연,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09-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연구용역, 2010.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Ⅳ)』, 연구총서 09-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김일중,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경제학적 일고」,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2, pp.123~150.
- 김일중·변재욱,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2, pp.55~89.
- 김준호·이동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총서 90-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지선·박미숙·김지영·홍영오,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연구총서 06-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김지선·홍영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한국형사정책연구

- 원, 2011.
- 노병호·신현구, 「체불임금 구제방안에 대한 재검토」,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pp.659~685.
- 대검찰청, 『검찰연감』, 각년도.
- 대검찰청, 「범죄통계개선 시행」, 대검찰청 예규, 대검기획 61101-571, 2001.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민희철, 「경찰력과 흉악범죄의 억지에 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 2011, pp.183~204.
- 박강우,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pp.103~142.
- 박강우, 「산업스파이 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p.129~60.
- 박순진, 「1990년대 강도 및 절도 범죄의 변화 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pp.107~127.
- 박순진,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과장된 인식과 자기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p.233~265.
-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연구총서 99-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박형민,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2, pp.45~76.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 심영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총서 91-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오경식, 「식품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0, pp.499~518.
- 윤성승, 「부도수표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부정수표단속법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8, pp.290~318.
- 윤중기, 「외국인 범죄의 동향과 대책」,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pp.481~657.

- 이동원,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가해자와 피해자 관점의 통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6권, 한국피해자학회, 1998, pp.207~228.
-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연구총서 10-16-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이창근·김의준,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pp.33~51.
- 이창무, “범죄는 줄고 있다,” 『중앙일보』, 2012. 10. 26.
- 이천현·임정호·박기석,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연구총서 09-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연구총서 00-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전영실·권수진·김성은·김은경·김재운·김지선·김한균·신의기·안성훈·윤해성·이승현·이원상·장준오·장진수·조병인·최수형·최영신·홍영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정신교,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pp.411~426.
- 『조선일보』, “사망자에 연금·보험료 ‘핑퐁’ 사회복지 보조금 줄줄 샌다,” 2012. 8. 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2/20120812016_08.html.
- 조현욱,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 침해—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한국법학회, 2008, pp.301~325.
- 조병인·박광민·최응렬·김종오,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연구총서 1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최인섭,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1964~2001』, 연구총서 02-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최인섭,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연구총서 05-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연구총서 97-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최인섭·김지선·황지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연구총서 03-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최인섭 · 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연구총서 93-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탁종연,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3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pp.169~194.
- 탁종연,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pp.245~286.
- 표창원,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방안」, 김두얼 편,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종합보고서』, 제2장, 기획재정부, 2010.
- 황지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pp.279~303.
- 황지태,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를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홍영오 · 김한균,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2, pp.3~44.
- Dills, Angella, Jeffrey Miron, and Garrett Summers, “What Do Economists Know about Crime?” NBER Working Paper 13759, 2008.
- Kim, Duol and Iljoong Kim, “Trade-Offs Estimating Trade-Offs in the Bureaucratic Allocation of Prosecution Resources,” manuscript, 2012.
- Levitt, Steven,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1), 2004, pp.163~190.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2008.
- Van Dijk, Jan, John Van Kesteren, and Paul Smit, *Criminal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Key Findings from the 2004–2005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and European Survey on Crime and Safety*, WODC Publication No. 257, Januar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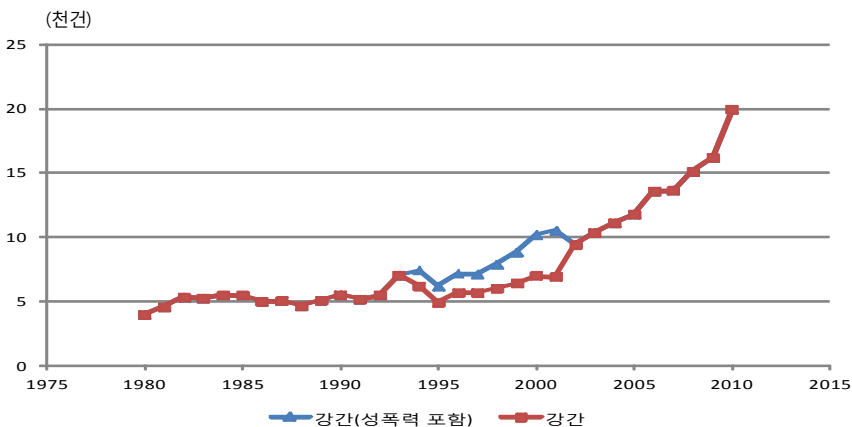
범죄 분류 기준

지난 3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 변화 혹은 집계방식 변화 등을 파악해서 일관된 시계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의 범죄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맞추어 과거의 범죄 분류를 재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해당 범죄는 2001년까지 특별법 범으로 분류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2002년부터는 강간에 포함되어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부도 1).

[부도 1] 성폭력 범죄의 재분류(1980~2010년)



2. ‘폭력행위 등’ 유형의 형법범계로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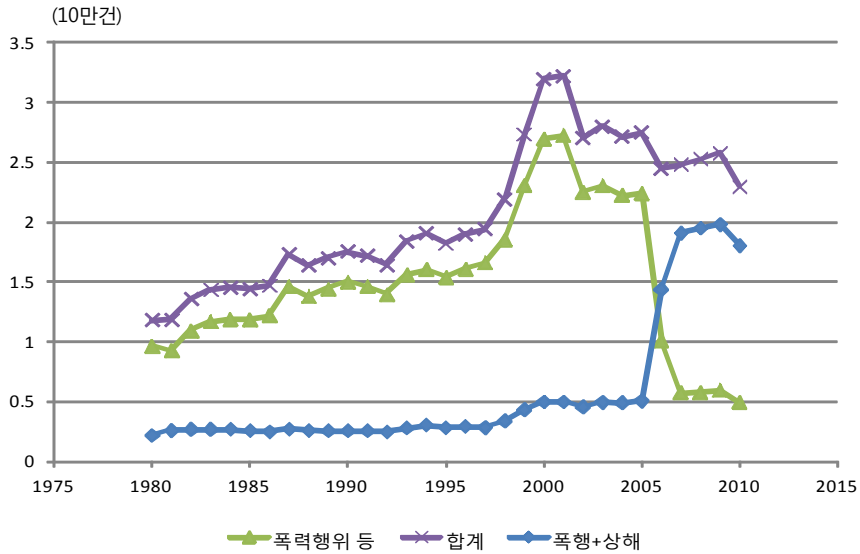
『범죄분석』에 의하면,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두 가지 유형은 2001년까지 특별법범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로는 ‘강력범죄(폭력)’ 유형에 포함되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2년 이전 두 유형의 범죄도 형법범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 폭행범죄의 통합

폭행과 상해의 경우, 각각 10,000건대로 2005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여주다가 2006년에 각각 6~7천건대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폭행은 2010년에 109,580건으로 1980년에 기록된 11,322건보다 무려 10배가량의 발생건수가 집계되었다. 이는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¹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고, 단순폭행범죄나 상해범죄로 집계되어 폭행과 상해의 추세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통계 수치를 살펴본 결과, 2006년에 급작스러운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폭행 및 상해와는 반대로 ‘폭력행위 등’ 유형의 발생건수는 갑자기 감소하여 둘 간의 극심한 격차를 보여준다(부도 2). 여전히 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변동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3가지 유형의 범죄를 통합하여 살펴볼 경우 심각한 등락현상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06년 3월 24일자로 제2조 2항을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에서 ‘야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와 같이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전영실 외(2011, pp.79~80)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부도 2] 폭행범죄의 추이(1980~2010년)



주: '폭력행위 등'은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합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

〈부표〉 형법범 분류 기준(2010년 기준)

분석상의 분류	발생건수	소분류	세부 유형	발생건수	비고
총계		총계	총계	1,917,300	
형법범	939,171	형법범	소계	939,171	
재산	300,616	재산	사기	205,913	
			횡령	26,312	
			배임	14,619	
			장물	3,206	
			손괴	50,566	
절도	268,007	재산	절도	268,007	
강력	266,490	강력범죄(흉악)	살인	1,262	
			강도	4,395	
			방화	1,886	
			강간	19,939	성폭력범죄 포함
		강력범죄(폭력)	폭행	109,580	
			상해	70,785	
			협박	3,315	
			공갈	5,233	
			약취와 유인	225	
			체포와 감금	764	
			폭력행위 등 (단체 등의 구성·활동)	1,705	특별법에서 형법으로 이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7,401	
기타	104,058	위조범죄	통화	5,440	
			유가증권·인지· 우표	936	
			문서	16,971	
			인장	445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552	
			직권남용	382	
			수뢰	798	
			증뢰	277	

〈부표〉의 계속

분석상의 분류	발생건수	소분류	세부 유형	발생건수	비고
기타	104,058	풍속범죄	간통	1,698	
			혼인빙자간음	23	
			기타 음란행위	733	
			도박과 복표	13,275	
			신앙	234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1,409	
			업무상 과실치사상	2,808	
			실화	2,072	
		기타형법범	명예	12,372	
			권리행사방해	3,180	
			신용·업무·경매	13,611	
			주거침입	5,563	
			비밀침해	37	
			유기	132	
			낙태	53	
			아편	0	
			교통방해	1,096	
			공무방해	13,508	
			도주와 범인은닉	328	
			위증과 증거인멸	2,740	
			무고	3,332	
			공안을 해하는 죄	20	
			내란의 죄	0	
			음용수에 관한 죄	19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	
			기타	5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Public Security, Welfare, Economic Growth: Evaluating Crime Incidence in Korea

Kim, Duol and Chun, Soomin

Identifying the status of crime incidence is the first step to developing effective criminal policy.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d several statistics on crimes to examine the status and trends of crime incidence that Korea is witnessing today, and thereby gained the following two important outcomes.

According to, Analytical Report on Crimes, published by Korea's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activities—excluding traffic —related— that took place in Korea in 2010 recorded 1,332,153 cases, meaning that three out of 100 Koreans fell victim to crime every year. Crime incidence in Korea has continuously risen by an annual average of 3.4% for the past three decades, and although the rate slightly decreased to 2.1% for the recent ten years since 2000, the upward trend still continues. The rise in crime incidence since 2000 has been led by typical penal code offenders, mainly property-related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ft and fraud. It is also noteworthy that despite the decline in violent crimes, cases of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increased at a fast pace.

Second, compared to OECD nations, Korea's crime incidence appears to be above the average, showing that the belief that Korea is a relatively safe nation is not supported in terms of statistics.

Above all, considering that many developed nations have posted a decrease in their crime incidence since 2000, the current trend in Korea's crime incidence implies the strong possibility of a worsening level of crime incidence.

These findings clearly point to the need for more concerted efforts so as to curb crime incidence and for increased focus on typical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ft and fraud. Subsequent studies should deal with how much more resources need to be put in and what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deterrence policy. The policy implication clearly presented by this study is the necessity of modifying statistics and performing consistent analyses of crime incidence trends. Korea's crime-related statistics have so far been criticized in many aspects, and therefore have not been used sufficientl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is has naturally led to the weakening of interest to making improvements in relevant statistics, continuing a vicious cycle. To sever this cycle requires more concerted efforts by researchers as well as policy makers. First of all, policy makers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duce the crime rate without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s to criminal activities, such as frequency, type, region, offenders, victims, harm or damage, etc., together with precise analyses of such information.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make fundamental changes and improvements to existing methods of gathering statistics and analyzing the trends, and also to invigorate academic research further, such as by releasing more crime-related statistics and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ddition, researchers also need to make efforts to prove the usefulness of statistical analysis, not to mention, point out limitations of existing statistics and demand improvements. This is because as more and more of these studies are accumulated, policy makers would learn to more clear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make some contributions, small but meaningful enough to achieve this shift in recognition.

Based on the crime incidence status confirmed by this study, the next step would be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rise in criminal

activities and then to come up with government-level responsive measures. In particular, subsequent studies will conduct a follow-up analysis that could present a more concrete direction for crime incidence policy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 number of ongoing crime deterrence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law enforcement officers, enhancing the rate of indictment and strengthening the penalty, and also by analyzing the effects of each policy.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윤희숙

양장 | 크라운판 | 191쪽 | 정가 8,000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을 다루었다. 본고는 통합적 소득보장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장시스템을 적극적 노동시장의 정책수단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 등 기존 정책수단을 대폭 정비·확대하면서 복지전달망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 분석

김정욱

반양장 | 크라운판 | 46쪽 | 정가 2,000원



정부조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건설공사에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투자사업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다차원 경매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다양한 입찰 제도하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이수일 · 이호준

반양장 | 크라운판 | 78쪽 | 정가 2,000원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의 적절성과 실효성 여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고영선 · 이재준 · 강동수 · 안상훈 · 유경준 편

양장 | 크라운판 | 623쪽 | 정가 15,500원



본 연구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거시경제, 재정, 금융, 산업 및 무역, 시장제도, 복지, 노동, 교육, 부동산 등 각 분야별로 한국개발연구원의 해당 연구자들이 핵심적 현안과제를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송인호

반양장 | 크라운판 | 68쪽 | 정가 2,0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과 소비 간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운영 시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경기위축이 주택가격 하락과 연계되었을 경우,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유경준 편

양장 | 크라운판 | 322쪽 | 정가 10,400원



본 보고서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의 2차연도 과제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을 고용과 연계된 관점에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학적인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김동석 · 김민수 · 김영준 · 김승주

양장 | 크라운판 | 177쪽 | 정가 7,400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할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 측면의 요인, 즉 생산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05년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반영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2010년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0~2010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새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현황과 과제

김연수

반양장 | 크라운판 | 75쪽 | 정가 2,000원

본고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해 비교적 이분법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 입각한 정책추진 과정의 결과로 인해, 유입된 외국인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노동시장의 숙련수준별 인력부족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것이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김희삼

양장 | 크라운판 | 149쪽 | 정가 7,600원

본 보고서는 학업성취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학교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학생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는 물론 각급 학교의 교원들에게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김재훈 · 이호준

반양장 | 크라운판 | 52쪽 | 정가 2,000원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사업 추진 지역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실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공투자사업 추진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황수경

반양장 | 크라운판 | 118쪽 | 정가 2,000원

본 보고서는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 연구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나타날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배경으로 향후 20년간 노동공급 전망이 어떻게 될지, 현재 고용의 세대 간 대체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점진적 은퇴 양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살피고 있다.



KDI 도서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단, 비공개 자료 및 배포 제한 자료는 제외)
- 본원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세미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된 연구보고서(인쇄물)를 KDI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경우 10%의 가격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KDI 발간자료

- 단행본,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KDI 정책포럼, KDI FOCUS, 연구자료, 기타 보고서 등
- 월간 KDI 경제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Economic Bulletin, 나라경제, click 경제교육
- 분기 한국개발연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개발협력 동향분석
- 반년간 KDI 경제전망

● 연간회비

- 개인회원 10만원
- 기관회원 30만원

● 가입방법

KDI 홈페이지에서 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입금: 우리은행 254-012362-13-113(예금주: 한국개발연구원)

지로(지로번호: 6961017), 신용카드 및 핸드폰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본원 기획팀(발간자료 담당자)에 직접 회비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대외협력실 기획팀 발간자료 담당

TEL 958-4344 / FAX 960-0652 / E-mail kimy1h2@kdi.re.kr

● 판매처

- 교보문고(광화문점 정부간행물코너) TEL. 397-3628
- 영풍문고(종로점 정치경제코너) TEL. 399-5632

정책연구시리즈 2012-16

치안 · 복지 · 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인 쇄 2012년 12월 27일

발 행 2012년 12월 31일

저 자 김두얼 · 전수민

발행인 현오석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전 화 (02)958-4114

팩 스 (02)958-4310

인 쇄 한국컴퓨터정보인쇄

©한국개발연구원 2012

ISBN 978-89-8063-693-8(93320)

값 2,000원



* 잘못된 책은 바뀐드립니다.